

다산포럼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2021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과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윈조 조약'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은 정상 간 '촉진외교'를 통해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이 100년과 60년을 서로 축하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미중 대립과 경쟁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북핵 협상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고립과 경제난에 직면했으며, 중국은 코로나 위기와 함께 2022년 20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국내 정치 일정에 몰두해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역시 국내 문제에 아프간 문제까지 꼬였다. 한국은 이미 대선 레이스에 진입하여 민감한 외교 현안이 오히려 정치 쟁점화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와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은 불가촉하고 불확실한 미국과의 대화에 선불리 나서기보다는 내부 체제 단속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라는 보수적 선택을 하

북한의 삼중고 속 중국의 역할은?

려는 듯하다. 북한은 중국과의 '사회주의 연대'를 강조하여 체제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해 급한 불을 끄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중국은 90년대 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전략물자를 지원하여 북한이 경제 위기의 고비를 넘기는 데 일조를 한 바 있다. 당시 북중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의 여파로 정례적인 정상회담마저 중단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의 체제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중국 국경의 안보 불안을 관리하고자 최소한의 지원을 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는 회복되었다.

중국은 북핵 위기가 고조된 2003년과 2017년에도 각각 대화 중재와 제재 강화라는 상이한 행보를 통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두 시기는 북핵 문제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여 대화로 견인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으로 제한된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거나 위기가 고조되어 북중 관계가 파국에 이를 정도까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는 신중함을 유지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위기 역시 한반도의 주요한 불안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점차 역할을 확대해 온 지난 28년의 세월은 사실상 중국의 부상 일정과 맞닿아 있다. 그런 까닭에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미국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북핵은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북핵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다.

왕이 외교부장이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 조항'을 활용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분명 북한에 대한 지지의사를 과시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먼저 선제적으로 제재 결의안을 훼손하여 미국과의 갈등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중국은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안정한 국내 사정 및 불확실한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변경보다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위상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중국이 우리가 희망하는 비핵 평화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촉진자' 또는 '적극적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협상을 중재해야 하는 과제 못지않게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기고

광주시 '2045 탄소중립 로드맵' 이대로 좋은가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개념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능동적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세웠고, 이에 앞서 광주시는 8월에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45년까지 '기후 안심 도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녹색산업 도시' 조성을 주요 실행 목표로 삼고 야심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른 도시보다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광주시의 AI-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설정한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하고, 실행 프로그램의 이행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현재 광주가 처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광주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면밀히 살펴보고 온실가스 흡수는 어디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폭염과 미세먼지 현상에 대한 지역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광주 지역 내 어느 곳이 언제 어느 정도 뜨거울지를 알아야 극한 기상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미세먼지 현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건축물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감 효율은 온실가스 및 기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넷째, 극한 기상 현상과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AI(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등을 이용한 체계적인 측정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 미세먼지, 탄소배출 흡수원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운용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시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는 '스마트

빅보드 구축' 사업으로 재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표출하고 실시간으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재난 정책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지원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광주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모르고 방향성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광주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 계획을 완성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얼마나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광주가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 대응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진일보할 수 있을 터인데 광주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기후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AI 그린 뉴딜과 2045 탄소중립 도시 조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AI-인프라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광주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낸 훌륭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시간과 공간 단위로 수집·가공하여 실행계획 영향평가가 통합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은 이미 시작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도 기후위기 대응 로드맵에 따라 2045년까지 쟁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청춘 특특

불안을 떨치는 법(法)



정상아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2년

타지에 살던 나는 올해부터 기숙사생이 아닌 자취생이 됐다. 자취생이 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런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그런데 자취생이 되고 난 후 불안감이 늘어났다.

편리해서 자주 이용했던 배달 서비스지만 주소나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토킹하는 사건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면서 배달원은 내게 경계의 대상이 됐다. 물론 모르는 배달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미안한 감이 없지는 않았다. 자취하며 생기는 불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취방이 위치한 곳은 원룸이 뿔뿔이 들이선 대학가 원룸촌이라 주변 골목길은 조용하고 으스스해 무서운 기분이 든다. 개인적 두려움을 넘어 객관적으로도 골목 구조상 범죄가 발생해도 눈에 띄기 어려운 곳이라 무서움은 더욱 크다. 그 길에서 행여 사람이 몇다

니지도 않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면 그때부터 온갖 불안한 잡념이 떠오르며 발걸음이 빨라진다.

이런 사소한 사건들은 모두 내 오해로 비롯된 불안이자 걱정일 수 있겠지만 스토킹 범죄 사례가 늘어날수록 불안과 공포는 점차 가깝게 다가온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의 정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대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스토킹 문제를 단순히 겁을 먹는 행위로 간주해선 안되며, 결코 가벼운 오해나 해프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지난 2019년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해 뒤따라가 여성 집 안에 침입하려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뒤를 이었다. 스토킹은 성폭력,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돼 사소한 범죄들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스토킹 범죄를 막고자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후 2021년 3월 24일, 법안이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국민들을 분노했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결론적으로 세 모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존재했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마저 든다.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 조치를 하는 법은 많을 것이다. 물론 범죄 후 사후 조치라도 하는 것이 아닌 한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하지만 미리 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중시도 필요한 법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건 오래전부터였다. 그런데도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처벌 조항에 맞지 않아서' 등의 갖가지 이유로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대신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다.

오는 10월 21일,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배달원을 의심하고, 같이 길을 걷는 것조차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는 피해자들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길 간절히 바란다.

社說

다시 공무원 자리 하나 늘리려는 발상 아닌가

광주시가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의 '개방형 직위'를 해제, 지역 문화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시는 성현출(57)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곧바로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다시 공직자를 문예회관장에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는 광주 문예회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했으나, 28년 만의 이러한 변화와 실험이 3년도 못 돼 허망하게 끝난 셈이다.

이와 관련 민간 전문가의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평가도 없이 솔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진행한 '28년 만의 시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계와 의회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관공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에서 공무원 대신 개방형 공모를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실제로 개관 후 지금까지 관장은 모두 시 공무원이 맡아 왔는데 모두 23명의 관장이 거쳐 갔고 평균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그러는 동안 전문성과 경영 능력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첫 민간인 관장이었던 성 관장은 지난 2019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후 임명되었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8년 만에 새롭게 도입했던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이번 개방형 직위 해제가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자리' 하나를 더 늘리려는 발상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회안전망 강화로 청년·노년 자살 막아야

자살 사망자 중 청년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광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곳도 전남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그제 발표한 '전국 자살 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광주에서는 1574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생애 주기별로 보면 중년기(35-49세)가 455명, 장년기(50-64세) 396명, 노년기(65세 이상) 352명, 청년기(19-34세) 332명 순이었다.

특히 광주는 청년기 자살 사망자의 비율이 21.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였다. 이는 전국 평균(15.7%)보다 5% 이상 높은데 취업난과 청년 빈곤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 7월 기준 광주 지역 고용률은 58.9%로 전국 평균(61.3%)보다 낮았고, 실업률은 3.4%로

전국 평균(3.2%)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전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노년기 자살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이 기간 2632명이 자살로 숨졌는데, 이 중 노년기가 907명으로 34.5%를 차지해 전국 평균(27%)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전남의 고령 인구 비율(24%)과 독거노인 비율(13.8%)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노년기 자살 사망자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수 조사 결과는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맞춤형 자살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청년과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와 사회안전망부터 촘촘히 다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갈등의 대선 티켓 확보를 위한 경쟁도 점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지역별 순회경선에 들어가, 결선투표가 없다면 10월 10일 후보를 선출한다. 이미 '경선 열차'를 출발시킨 제1야당 국민의힘도 오는 11월 5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 역시 경선을 통해 10월 6일 대선 후보를 뽑는다.

차기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물론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보건, 환경 등 모든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원하는 시대정신이나 구체적 해법이 중심 이유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과거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국적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선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이 지사의 '바지 발언 논란'을 필두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공방 등 네거티브 난타전이 이어진 데 이어,

겨운 스페인 독감처럼 작금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5년 전 촛불을 들었던 심정호 보다 나는 미래를 위한 냉철한 검증과 치열한 선택의 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대선 의 계절. 역사의 진전은 무수한 개인들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이 지사의 '바지 발언 논란'을 필두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공방 등 네거티브 난타전이 이어진 데 이어,

역사의 진전

겨운 스페인 독감처럼 작금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5년 전 촛불을 들었던 심정호 보다 나는 미래를 위한 냉철한 검증과 치열한 선택의 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대선 의 계절. 역사의 진전은 무수한 개인들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이 지사의 '바지 발언 논란'을 필두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공방 등 네거티브 난타전이 이어진 데 이어,

겨운 스페인 독감처럼 작금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5년 전 촛불을 들었던 심정호 보다 나는 미래를 위한 냉철한 검증과 치열한 선택의 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대선 의 계절. 역사의 진전은 무수한 개인들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이 지사의 '바지 발언 논란'을 필두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공방 등 네거티브 난타전이 이어진 데 이어,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